
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

2020. 4. 6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각에서 '기업자금 위기설'을 제기하는데 실체가 있는 주장인지?

☐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려움

-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나,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음

☐ 이러한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,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,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

☐ 정부는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자금흐름 및 기업의 자금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, 필요시 적기에 대처할 것임

2. 정부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CP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, 어중간한 대책으로는 손볼 수 없을 만큼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?

☐ 그렇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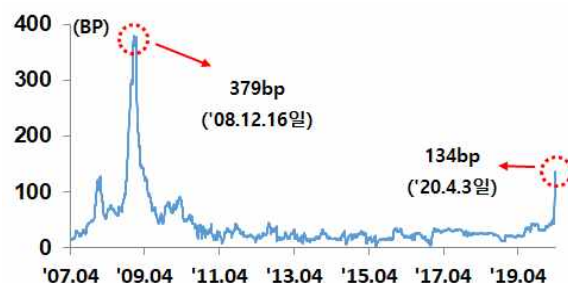
☐ 최근 CP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, 3월 분기말 효과가 있었고,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님

-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임
- 또한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,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79bp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음

< 韓-美 CP 스프레드 비교 >



< 한국 CP 스프레드 추이 >



☐ 특히,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 가동중인 4.2일 이후에는 기업발행희망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

3. 정부는 “곧 나아질 것”이라거나 “전폭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는 말만
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.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에
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?

- 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,
 이에 따라 100조원+@ 규모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(3.24)한 것임
 - 아울러, 한국은행도 3.26일 무제한 RP 매입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 RP
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, 4.2일에는 한은법
 제80조에 따라 非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
- ☐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
 확고한 방침임
 - 기업의 규모,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既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
 통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

4.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, 기업들이 만성적·총체적 자금
 부족 상황에 처한 것 아닌지?

- ☐ '20.1분기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폭은 '19.1분기 대비 크게 확대(+46.1 → +61.7조원)
 - 이를 가지고 기업이 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움
- ☐ 기업 자금조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
 -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,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의
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
 -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되었음
 -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을 보면, CP 등 단기자금조달 증가세는 둔화되고,
 대출·회사채 등 장기자금조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

< 기업부문 자금조달 실적(잠정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	CP/전단채 순발행액	회사채 순발행액	은행 기업대출 잔액 순증	기업자금조달 순증규모
'19.1Q 순증액 (a)	9.2	14.1	13.6	46.1
'20.1Q 순증액 (b)	7.2	14.6	32.7	61.7
순증액 비교 (b-a)	△2.0	+0.5	+19.1	+15.6

5. 채권시장안정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되었는데,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당초 시장안정 효과는 못내고 있는 것 아닌지?

- ☐ 채안펀드는 자금조성을 마치고 4.2일부터 본격 가동중이나, 4.2일 이후에는 기업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임

* 4.2일 발행된 A1등급 일반기업 CP 대부분의 발행금리는 민간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평균 발행금리(민평금리)보다 20bp 이상 낮게 결정

- ☐ 회사채,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, 시장에서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

* 美 Fed의 CP 매입기구인 CPFF도 유사하게 운영 (Pricing will be based on the current 3-month overnight index swap(OIS) rate plus 200 basis points.)

- ☐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, 시장수급 보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

6.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이 아닌 회사채, CP는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? 망할 회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릴 회사만 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?

- ☐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○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

○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非은행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할 경우 채안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,

-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신용등급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

- ☐ 그러나 채안펀드의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기업을 포기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님

○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채, CP에 대해서는 P-CBO, 회사채 신속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음

○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

7. 대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구노력, 일부부담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反 기업정서에 편승하는 것 아닌지?

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님

-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+@」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,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
- 그렇다고 '100조원+@'로 기업자금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음

☐ 따라서, 소상공인·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·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임

-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, 금리,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임
- 또한,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책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

8. 대기업 지원에 앞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, 그냥 대기업 지원해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아닌가? 자구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?

☐ 대기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시장조달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임

☐ 과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시에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하였음

-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운영시 차환 물량의 일정 비율(예 : 20%)은 발행기업이 자체상환토록 하였음
-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(P-CBO) 운영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일부(예: 9%)를 후순위로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도록 하였음

☐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식, 범위 등을 조정하겠음

9.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? 왜 금융회사의 CP·회사채는 지원하지 않는지?

- ☐ 금번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는 것임
- ☐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 -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,
 - * 4.2일까지 증권금융 등을 통해 증권사에 총 4.6조원의 유동성 공급
 - 또한,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
 - * 한국은행은 3.26일 무제한 RP 공급 방침을 발표하였고, 4.2일에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
- 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채안펀드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나, 이 경우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움

10.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모순 아닌지?

- ☐ 금융지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
 - 다만,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하여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함
 - 은행권의 BIS 비율, 부실채권비율 등이 과거 위기시에 비해 크게 개선
 - * 국내은행 BIS 비율 : '08말 12.3% → '19말 15.3%
 - 부실채권비율 : '08년 1.14% → '19말 0.77%
- ☐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
 - 채안펀드는 시장수급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우량기업 채권위주로 매입하는 등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하고,
 - LCR, 예대율 등 금융권의 규제부담도 신속하게 완화하겠음
- ☐ 앞으로도 금융회사 건전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 나가겠음

11. 당국은 당장의 지원실적 생색내기에만 급급할 뿐, 실제 금융지원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애로 해소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?

☐ 금융권의 규제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겠음

○ 외화 LCR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함

* 현행 80%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%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(금융위 의결 필요) (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('20.3.26))

○ 이와 함께 현재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
- 통합 LCR 규제, 예대율, 중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겠음

12. 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으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음. 기내식 생산 공장 등 하청업체 연쇄 부실도 우려됨

☐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은 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

○ 다만,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*이 높아,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,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* 연결기준 '19년말 A항공사의 부채비율은 1,386.7%, B항공사의 부채비율은 871.5%

○ 관계부처,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·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중임

☐ 결론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

13.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지?

- ☐ 한국은행 소관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러우나,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함
 - 3월 24일 100조원+@ 대책 마련시 한국은행이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음
 - 3.26일에는 '98년 외환위기나 '08년 글로벌위기 때에도 없었던 무제한 RP공급 방침을 발표하고, 4.2일에는 RP를 통해 5.25조원을 공급함
- ☐ 이에 더 나아가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非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(4.2일)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14. 최근 언급되는 면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은 하나같이 '빛 좋은 개살구'에 불과하다며 신뢰하지 않는 모습. 어떻게 면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인지?

- ☐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 코로나19 지원 관련 면책 공문을 발송하는 등(2.18, 3.13일)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※ (2.18일) 피해기업 지원 관련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안내
 - (3.13일) 다음의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
 - 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
 - ②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장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
 - ③ 타 기관(지신보 등) 업무 위탁을 통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
- ☐ 보다 체계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면책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음(4.7일 개편안 발표)

15.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관련 적체가 심각한 수준인데,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?

- ☐ 금융지원 초기에는 지역신보에서 발생하였고, 최근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(직접대출) 지원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함
 - ☐ 이를 해결하기 위해, 중기부·기재부·금융위가 협력하여 대출신청·접수 업무의 은행위탁, 대출수요 일부의 시중은행(이차보전)·기업은행(초저금리대출) 분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다만, 은행 신용대출 상품은 소진공 자금에 비해 자금이용 기간(만기)이 짧아*, 고객들이 소진공 상품을 선호하고 있어 소진공자금에 대한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음
- * 대출만기 : (이차보전 상품) 1년 (초저금리) 3년 (경영안정) 2년거치 3년
-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에게서는 가능하시다면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

16.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신규자본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쌍용차를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?

- ☐ 주주·노사가 합심하여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
 - 마힌드라 그룹이 4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투자자 모색 지원 계획을 밝혔고,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쇄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
- ☐ 쌍용차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,
 - 채권단 등도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, 자금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